

岐路에 선 金正日體制와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서평] 方燦榮著, 「岐路에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博英社, 1995)

고 성 준

(제주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 目 | 次 |
|-------------------------------|-------------------------------|
| 1. 서 언 | 3) 중국의 경제개혁·개방모델과 김정일체제의 선택 |
| 2. 岐路에 선 김정일체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 4) 핵문제를 둘러싼 현안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
| 1)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제, 그리고 경제관리메카니즘 | 3. 맺 음 말 |
| 2) 북조선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합과 모순점 | |

1. 서 언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붕괴현상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나아가 그동안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카리스마적 지배력을 발휘해오던 김일성이 돌연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장래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이 물고온 초기의 '기대와 우려' (?)와는 달리 아직도 북한에는 이렇다할 변화를 찾아 보기 힘들다. 물론 몇몇 징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더 냉철하고 과학적인 견지에서 포스트김일성체제, 즉 김정일체제와 북한을 바라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方燦榮교수의 『岐路에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장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문가들 간에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의 전망을 하여왔다. 먼저 그 하나의 전망은 '주체의 고수'론의 시각이다. 즉, '주체의 고수'론은 북한의 논리를 대폭 수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권의 개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주체사상내에서 점진적이고 신축성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구소련이나 동구의 사회주의는 '비자주적인 사회주의'로 파악하면서 북한의 '주체형 사회주의'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 모델이므로 북한의 사회주의는 기존 소련·동구의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¹⁾ 이 입장에 속하는 논자로는 김남식 등이 대표적이다.²⁾ 한편, 또 다른 하나의 전망은 '점진적 개혁'론의 입장이다. 즉, '점진적 개혁'론은 북한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은 주체사상의 수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북한의 특이성을 주체사상에 근거한 유일지도체제와 전시동원적 통제체제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체제의 경직성은 반미의식의 희석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점진적 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며 유일지도체제의 수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³⁾ 이 입장에 속하는 논자로는 이종석 등이 있다.⁴⁾

이러한 두 전망은 시기적으로 사회주의권 개혁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어 아직 사회주의의 붕괴로까지는 완결되지 않은 시기에 개진된 견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찰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을 지켜본 후에 개진된 최근의 논의들에서도 앞의 두 가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런 전망을 보여주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견해는 다른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견재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결국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주체사상을 기조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는 관계없이 체제 내적으로 강력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은 주체사상과 체제유지를 해나가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방안의 모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최대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논자로는 최수영 등이 있다.⁵⁾

한편, 북한의 장래와 관련한 이상과 같은 전망적 견해들에 대해 방찬영교수는 조금은 저돌적이라 할 정도로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의 표현을 직접보자.

1)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형성사, 1991), 53쪽.

2) 김남식,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 것인가」, 『역사비평』, 90, 겨울.

3)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위의 책, 71쪽.

4) 이종석, 「북한 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 『사상문예운동』, 90, 봄.

5) 최수영,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韓世政策研究院 편, 『南北韓 경제교류와 투자전망』(한세, 1994)

“...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북조선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문헌들을 대하면서 이들의 이해와 인식이 대단히 왜곡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감지했다. 이들 학자들의 북조선의 정치·경제·사회상황에 대해 제시한 假說들과 分析過程들이 북조선체제의 본질 및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했다기보다 하나의 편견을 지닌 영상(image)에 의존함으로써 심히 곡해되고 잘못돼 있음을 발견했다. 더욱이 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가설들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거쳐 정설로 입증되기에는 현실성·합리성·치밀성·논리적 정연함이 부족하였다.”⁶⁾

본론에서 방 교수의 ‘정론’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지만, 여기서는 뒤의 ‘정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처럼 그가 자신있게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할 수 있을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측면에 서기로 한다면, 잠시 방 교수의 학문적 배경과 실천적 경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중국 경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였다. 1978년 소련과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그는 사회주의 개혁이 시작된 즈음에서부터 최근까지 100회에 걸쳐 러시아와 그 밖의 CIS 공화국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고르바초프, 덩소평 등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무수한 기업소들과 공장들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특히, 지난 91년 이후 94년까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이 나라의 수도 Almaty에 서방식 경제경영대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 사유기업들을 관리·운영할 전문경영인들을 양성하여 왔다고 한다. 이러한 학문적·실천적 시야를 겸비한 그가 최근에는 북한을 방문(1993. 11. 2~13일)하여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펴낸 책이 바로 『岐路에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셈이다.

그러면 방 교수의 본론적 ‘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岐路에 선...』을 집필한 일차적인 목적을 밝혀 두기로 하면, 즉 그것은 북한체제의 존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기본성격과 통치이념·체제 및 관리메카니즘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내재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유도하고 한국정부의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는데 두고 있다.

6) 方燦榮, 『岐路에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박영사, 1995), 서문 vi 참조. 이하 방 교수의 견해인 경우 직접인용을 제외하고는 주를 생략함.

2. 岐路에 선 김정일체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방 교수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부조리로 인하여 체제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소련으로부터 답습·모방한 사회주의통제계획경제와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고 통치이념으로 채택·실시해 온 주체사상의 실천 결과라는 것이다.⁷⁾ 그래서 그의 우선적 관심은 주체사상과 경제체제 간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된다.

1)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제, 그리고 경제관리메카니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연구해 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정치와 경제 간의 유기적 상호관련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회주의와는 달리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주적' 주체사상을 사회운영의 근간으로 삼고있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경제와의 관련에 대한 분석은 당연한 논리적 순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순서를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물론 구체적인 연구대상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거나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체로 그 순서를 무시하는 연구사례를 보면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사회주의 경제분석에 원용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⁸⁾ 또 사회주의 혹은 북한의 내적 경제논리에 주목한 연구라 하더라도 하부구조를 움직이는 상부구조에는 주목하지 않고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부구조만을 분리시켜 접근하는

7) 방 교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원인이지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책임지우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를 테면, 그는 이종석 박사의 견해, 즉 "북한주민들의 민주적 삶의 구현을 가로막고 북한사회의 지속적인 생산력 발전을 지체시키는 현재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사회주의체제나 현상적으로 나타난 침체현상이라기 보다는 유일적 영도체제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에 내재하는 의미를 간과한 견해로 합리적인 정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종석 박사의 견해가 실린 논문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4)

또 상부구조인 주체사상과 정치체제가 경제에 미치는 함축적인 의미를 경시하고 단순히 하부구조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점만을 현재 북한 위기의 요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8) 이를테면, 계량적 방법에 의하여 남북한 경제를 평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거나,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경우의 연구도 적지않은 것 같다. 이러한 류의 연구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론에서 인용했던 방 교수의 기존의 북한연구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러한 류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一聲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와 경제개혁의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이념과 경제체제 간에 내재하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이념은 제반 경제활동의 목적(end)와 수단(means) 양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체제내의 여러 기구와 관리방법 및 자원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념의 변화없이는 경제개혁이 불가능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려면 이념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양자간의 상호불가분적 관계를 좀 더 구체화·세분화하여 주목하기로 한다면, 主體思想과 唯一的 領導體系, 그리고 經濟管理메카니즘이라는 세 가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클리어업되어야 한다. 그것이 왜 그런가하는 것은 이제부터 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얘기하기로 하면, 북한사회는 한마디로 이른바 브레진스키교수 등이 주장했던 ‘左傾的 全體主義(left - wing totalianism)’사회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전체주의사회의 구비요건은, ① 유일한 공식이데올로기, ② 유일한 절대통치자, ③ 향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정당, ④ 독점화된 당과 국가통제하의 언론매체, ⑤ 법을 초월한 권력의 통제, ⑥ 팽창주의적 편향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유일한 절대통치자에 의해 규제되고 지배된다.

방 교수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경우에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적 구비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일한 공식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유일한 절대통치자로서의 김일성과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김정일, 향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서의 조선노동당, 독점화된 당과 국가통제하의 언론매체, 법을 초월한 통치자의 권력과 통제, 그리고 계급투쟁이론에 기초한 팽창주의적 편향 등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유일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자인 김일성 혹은 김정일에 의해서 제반 경제활동의 목적(end)과 수단(means) 뿐만 아니라 체제내의 여러 기구와 관리방

법 및 자원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규제와 유일적 지배가 이루어진다.

사실 북한사회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분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체주의의 개념없이 북한 정치체제의 특이한 점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어느 연구자의 말이 옹변 하듯이 전체주의적 관점은 기성 북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기초였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모델의 정체성, 개념의 모호성, 사회주의권 개혁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¹⁰⁾ 등을 들면서, 이미 서구학자들¹¹⁾ 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북한연구자들¹²⁾ 간에서도 이론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교수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 전체주의사회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입장은 다른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이론적 적실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북한을 설명하는데는 여전히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 ‘주체’라는 개념은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역사적 원리로 재정립되고 인민대중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전제를 통해 유일적 영도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이 주체사상과 결합할 수 있는 이론적 명분을 찾게된다. 이렇게 해서 주체사상 내에 은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유일적 영도체계는 북한통치체제의 기본성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경제 재생산을 위한 자원 배분과 경제활동의 조정·관리를 위한 결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일적 영도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논리는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의 불가분의 유기적 생명체로 다루는 이른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다. 개인은 수령의 영도를 떠나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없다. 또 반대로 당과 수령도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역사를 창조하는 정치적 영도자로서의 생명을 보지할 수

9) 이종석, 「북한 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1990, 가을), 81쪽.

10) 이종석, 위 논문, 81쪽 참조.

11) 대표적인 학자와 저서로는, Stephan White 외, 『공산주의 정치체계(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인간사랑 역, 1989)가 있다.

12) 대표적인 학자와 논문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안병영, 「북한연구방법론」, 『현대공산주의 연구』(한길사, 1982)

이은숙, 「북한 '사회'의 현황과 방법론적 과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1982)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1988. 12)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올유 문화사, 1990)

이종석, 「북한 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앞의 책.

없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한갓 개인에 지나지 않으며 대중과 떨어진 당도 당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처럼, 유일적 영도체계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여 북한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고 고매한 김일성 한 사람에 의해 규제되고 지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김일성의 지위를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김정일이 차지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에서 前통치자의 후계자들은 바로 전 통치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본인의 지배 합리화와 개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김일성주의는 기존 사회주의국의 경험과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없도록 이론적으로 틀지워져 있다는 것이 방 교수의 주장이다. 즉,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후계자론이 그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온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영도를 어김없이 실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주체사상 이론가에 의하면, 혁명전통을 변질시키거나 다소라도 수정하는 것은 벌써 수령의 위업의 계승이 아니라 부정이며 배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의 어떠한 가능성도 철저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북조선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함과 모순점

이상에서처럼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계가 북한의 경제관리메카니즘을 지배·규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나아가 그것들이 경제적 침체와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하자.

사실 그동안 북한경제의 전개과정과 현황, 그리고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다루어져 왔다.¹³⁾ 그러나 방 교수가 보기에 기존연구들은 상부구조로서의 주체사상과 정치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없거나 경시되고 주로 하부구조인 경제체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온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시 주체사상의 이념적 지표에 유의하면서 그동안 북한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에 대한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방 교수의 연구결과만을 볼 수 밖에 없다.

먼저, 북한의 최근 경제지표를 간단히 보자. 북한은 1990년에 국민총생산의 성장면에서 연성장을 마이너스 3.7%를 기록한 이래 1991년에는 -5.2%, 1992년에는 -7.6%, 1993년에는 -4.3%를 기록했고, 1994년에도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 대외무역부문에서도 총무역량이 1990년 47억달러에서 1991년 27억달러 그리고 1992년에는 26억달러로 감소했다. 1993년 북한의 수출총액이 약 10억달러로 추산됐는데, 이 액수는 한국이 같은 해에 달성한 총수출액 822억 4,000만달러의 1/81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북한의 대외부채도 1990년에 78억 6,000만달러에서 1992년에는 도합 97억달러로 증가했다. 1992년 3월 미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재정잡지 『기관투자』에 의하면 북한의 국제채무상환에 대한 공신력이 119개국 중에서 117번째로 평가·집계되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몇몇의 경제지표들은 현재 북한이 당면한 경제침체의 깊이와 폭을 반영해 준다. 그러나 제반 경제적 지표와 통계자료만으로는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상에 내재하는 결함과 경제관리상에 내포된 모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방 교수에 의하면, 북한의 누적적이고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주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답습·모방한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내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결함이다.

13) 북한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서들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을유문화사, 1990)
 정상훈·연희청 외 공저, 『북한경제의 전개과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편, 『국제학술회의: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1992)
 한세정책연구원 편, 『南北韓 경제교류와 투자전망』(한세, 1994)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발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이 북한경제체제 자체에 미친 영향은 피상적이고 비실제적이었다. 주체사상이론가들은 소련으로부터 답습·모방한 경제체제내에 내재하는 구조적 결함을 분석·이해하고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기본성격을 주체사상의 이론에 따라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는 데에 주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하여 답습된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의 기본성격은 ①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②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③ 경제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조선노동당의 결정적 역할 등이다.¹⁴⁾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고 관장된다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經濟財가 국가에 의해 생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제반 경제활동이 유일한 단일조직인 국가에 의해서 조직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비와 축적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 통제와 관장은 사회주의 재생산활동과 축적이 인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기보다 유일한 절대통치자의 의도와 목적을 반영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소비와 축적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 욕구에 대한 국가, 즉 절대통치자의 통제와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또한 생산과 분배를 위한 제반 경제활동에 대한 중앙집권적 계획화는 자원을 배분하고 소비와 축적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개인이 아닌 국가당국에 귀속됨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적 목적을 위한 수단의 분배를 관장·통제하는 국가당국, 즉 당은 인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통제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이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온말을 마련해 주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경제관리(미시적 측면)/정책면(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침체를 낳는 요인으로서는 ① 관리메카니즘 면에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노선과 당의 집체적 지도를 중시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관리방법의 불합리성 ② 정책면에서 폐쇄정책과 동일시

14) 통제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스탈린체제의 기본성격은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제반경제활동의 중앙집권적 계획화, 당의 향도적 역할, 국가와 당 간의 공생적 관계, 국가에 의한 사회의 흡수, 이념의 독점, 폭력의 사용, 법률의 결어 및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방찬영, 『기로에 선』, 63쪽 註3 참조.

되는 자립경제노선과 중공업우선정책 및 과중한 군비사업에 대한 지출 부담이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제반 사회주의체제가 보편적으로 노정한 만성적 경제침체와 경제발전 둔화현상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내에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과 결합에서 연유한다기보다는 경제관리메카니즘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를 야기시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인민대중의 민의를 무시하고 세도와 관권을 남용하는 관료주의 병폐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태동하게 된 것이 혁명적 군중노선과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청산리관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였던 것이다.

혁명적 군중노선이란 관리가 책상에 앉아 계획하고 통제하는 관료주의적 병폐에서 벗어나 당이 직접 인민대중들의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것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노선을 고수하고 경제과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정치교양사업을 앞세워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중노선은 김일성이 청산리농장을 방문하면서부터 제기되어 대안의 사업체계로까지 확대·정립하게 된 것으로, 관리인이나 지배인보다 당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이행하는 행정적 개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의 권한강화와 당에 의한 군중노선의 채택은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의식화를 고양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이와는 반대로 농장관리인이나 공장지배인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기업의 창의력과 창발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에서는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관리상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거니와, 다음으로는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결합을 보기로 하자. 먼저, 생산수단의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계획체제하에서는 경쟁적 시장조건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화작용하에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가격법칙이 성립될 수 없다.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엄청난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는 이 가격법칙의 부재로 인한 비합리적인 경제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북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통제계획경제체제의 결정적 결합은 그 사회의 모든 경제인들이 보지하고 있는 제반경제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불완전하고 미완성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어떤 중앙당국에 의한 합리적인 경제 계획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한편,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은 경제활동상의 비교우위성에 의거한 국제분업의 원칙의 수용을 거부하고 자급자족을 원칙적 목적으로 하는 재생산 구조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의 채택은 어떤 심오한 경제적 비교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거한 것이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구조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한데, 그들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우선 중공업우선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자가당착속에서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은 국방공업발전으로 연결되어 과중한 군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아 엄청난 자원 분배의 왜곡과 낭비를 하고 말았다.

3) 중국의 경제개혁·개방모델과 김정일체제의 선택

최근 많은 북한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미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채택·추진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 왔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이들의 시각에 의하면, 대체로 북한은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특히 중국식 개혁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¹⁵⁾ 이러한 증거로는 1984년에 소개된 '8·3 인민소비재안', 합영법의 제정 및 라진·선봉에 대한 경제특구의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 교수에 의하면, 북한이 내린 이 정도의 조치들을 가지고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물론 방 교수도 결국 북한의 선택은 중국식 모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의 교훈에 따른다면, 아직 북한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의도보다는 국부적 조치들에 의하여 현 경제침체를 활성화하여 보려고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가 단순한 몇가지의 국부적 조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점과 결함을 수

15) 이러한 시각을 담고있는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는, 최수영,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남북한 경제교류와 투자전망」(1994), 앞의 책. 김성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과 정부의 역할」, 같은 책.

정함으로서만 해결될 사안임은 누누히 강조하였다. 방 교수는 만약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따른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국적 교훈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구성요건인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대한 개혁이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대한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수행되지 않고 단지 시장력의 주입·배합만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동태적이고 경쟁력있는 체제에 변형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적어도 현재의 국가기업들을 전면적이고 일시적인 사유화를 통한 사기업으로 변형시킬 필요는 없지만 소유형태를 다변화시키고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신흥 사기업들이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둘째, 가격체계에 대한 개혁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가격법칙의 부재는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니와,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2중가격체계를 설정하였다가 개혁이 진척됨에 따라 자율가격의 역할과 기능을 급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이처럼 북한도 거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계획가격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철폐하고 자율화하는 충격요법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가격자율화 과정과 이러한 접근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경제현대화와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동태적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기술을 취득하고, 또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선진 경영지식을 습득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및 생산원자재 조달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을 위한 시설투자의 재원을 마련해줄 전략적 선도부문의 육성·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개방정책의 수용 및 시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치도 중요하다. ① 기존의 자급자족 경제자립노선에서 대외무역을 주 매체로 삼는 외향형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선회 ② 중국의 화교참여유도와 같이, 외국에 산재해 있는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③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합작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약의 철폐 등이다.

넷째,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과 투자이다.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에 관한 중국의 체험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향상됨으로써 공업화 및 수출산업 육성 과정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해 창출된 잉여노동력을 산업화과정에 투입시키고 농가수입증대를 통해 공업생산품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생산증대와 이로 인한 농산물 수입감소로 인해 절약된 외화를 경제현대화를 위한 투자부문으로 전환·활용할 수 있었다.

다섯째,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그들은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경제관리에 있어서의 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계획가격을 자율화하고,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법제를 제정·강화하고, 정부·권력기관 및 기업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업 파산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분권화를 위한 권력을 하방하는 등을 망라한 개혁의 광범위한 범위와 내용들이 정치체제의 개혁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주체사상과 정치체제가 경제개혁정책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상응하는 정치개혁이 뒤 따라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 경제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해 선진 산업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시장 확보정책의 일환으로서 최혜국대우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친선외교정책의 수립·채택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계급투쟁노선과 팽창주의적 대결외교를 철회하여야만 할 것이다.

일곱째, 북한 경제체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야기되는 개혁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저지하고 어려운 개혁과정을 힘차게 주도해 나갈 탁월한 정치적 역량과 카리스마를 지닌, 이를 테면 중국의 덩소평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덟째, 경제현대화와 경제발전은 단지 제도적인 마련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인간의 집요한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체제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적인 경영인들과 기업인들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전문지식, 정보 및 기술 등을 익히려는 집요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중국의 체험으로부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중국의 모델을 따르며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아갈 자세와 인식이 되어있을 때에야 비로소 중국적 교훈이 명실공히 교훈으로서의 효과를 보게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방 교수의 견해는 아직은 '노우(No)'라는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점을 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북한 위정자들의 대외경제협력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① 북한의 위정자들은 현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원인이 근본적인 체제적 결함에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경제관리메카니즘 상의 문제라고 보는 피상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고, ②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의 원인을 악의에 찬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사회주의체제내의 우경적 기회주의사상의 침식작용의 탓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는 ③ 김정일에 의해 더욱 체계화된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 속에 은거하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에 의하여 정권을 이양받을 김정일 자신의 입지이다. 경제개혁은 정치개혁과 이념의 수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니와, 김일성주의의 수정은 당과 인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④ 끝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요인은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남북한 체제비교적 측면의 모든 상황적 여건이 한국보다 열세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은 결국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내지 체제붕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의 위정자들로서의 선택은 정치개혁을 수반하는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수용·실시함으로써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좌경적인 전체주의적 통제와 폭력을 강화함으로써 체제붕괴를 저지하려는 편법을 강구·의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핵무기개발전략인 것이다.

4) 핵문제를 둘러싼 현안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핵문제를 둘러싼 단순히 북한의 어느 특정한

체제와 외부세계 간의 대결이 아니라 북한 국가체제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활이 걸린 극한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은 이와 같은 인식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낙관적이고 피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방 교수의 견해이다. 이를테면, 최근의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응해온 한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대북접근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직접적으로 이해가 결부되어 있는 미·일·중 및 러시아의 안보적 이해를 충분히 내포할 만큼 포괄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내재하는 긴박성을 반영할 만큼 정교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 교수가 말하는 체제붕괴의 위기로까지 몰고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까지 고집하게 된 상황적 긴박성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요컨대, 그것은 ① 안보적 입지의 약화, ② 경제체제 구조상의 결함, ③ 경제관리 및 정책에 내재하는 불합리성과 모순, ④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우호적인 변화, ⑤ 한국의 경제·정치부문에서의 상대적인 위상의 향상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북한은 1950년 한국동란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서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큰 전략적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이와 같이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는 심화될 남북한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평형장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보적 긴박감의 조성으로 체제유지를 연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선택이 체제유지를 위한 궁극적인 장치는 될 수 없거니와, 최근 핵개발 포기협상을 통하여 미국 등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야 말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들이다. 이를테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개발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미수교, 불가침조약(평화조약), 경수로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제원조 및 군축제안 등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이 때 일본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배상금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와 배상금을 얻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조치로 삼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는 국부적인 것에 불과하거니와, 북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체제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방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마치 암환자에게 영양제를 공급·투여함으로써 암을 완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그야말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그대로 岐路에 서 있다는 것이 방 교수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즉, 경제개혁·개방정책을 하지 않으면 체제모순이 폭발하여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또 반대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방에 수반되는 개혁이 결국은 체제붕괴로까지 인도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현실적인 대안이 전체주의적 통제와 폭력을 강화하면서 체제붕괴를 저지하려는 편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진보론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착수해 나감에 있어서 야기될지 모르는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한국이 북한체제를 붕괴·진복시키는 기회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빙성있고 설득력있는 보장이다.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서서히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이고, 체제는 이미 북한과 달라졌지만 러시아는 전통깊은 북한의 우방국이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이 얼마든지 있음에 유의하여 한국은 그들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체제를 같이하는 유일한 북한의 우방국임에 유의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 끝으로 북한체제의 전반에 대한 투철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가 한민족 전체에게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돌발스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일이다.

3. 맺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방 교수의 모든 견해들을 평가적 관점에서 요약하여 살펴 보았거니와, 이제는 서평자의 몇 가지 평론적 소감을 밝히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우선 방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독자를 압도하는 것은 논리적인 정연함에 기초한 자신있는 정론의 표출이다.¹⁶⁾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학문적 배경과 실천적 경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충분한 자료섭력과 수준높은 학문적 통찰력이 이루어낸 것 결실이라 할 것이다. 또 여기에는 남북한 어느 한 쪽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민족 전체적 입장에 설 수 있는, 제3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추가 되어야 하리라, 따라서 방 교수의 글은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안목을 제시하여 준다.

이를 테면, 방 교수가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간의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주문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연구하는 데에만 필요한 관점은 아닐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몇몇 기존 북한경제연구물들에 비추어 볼 때 방 교수의 연구는 북한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법에 유의하여 분석된 북한의 주체사상과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방 교수의 견해가 우리에게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방 교수의 저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단순히 실상파악과 상황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매우 정책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의 문제에 대한 쟁론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북한연구는 정책지향적 성격을 띠어야 당연할 것이지만, 방 교수의 견해가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자적 위치의 확보를 통한 남북한 정책자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데에 있다. 방 교수의 저서가 한국에서 출간되고 한국 정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 한국의 독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오히려 기로에 선

16) 방 교수의 '정론'이 집약되어 제시된 내용만을 보려면 결론장을 참조. 여기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집약하면서, <가설>과 <정론>으로 나누어 정확한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방찬영, 『기로에선...』, 327-351쪽.

북한체제, 김정일 지도체제에게 합리적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려는 데에 더 큰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리라. 이를 테면, 방 교수는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 하라고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고 그 선택에 따른 방법과 전략을 중국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가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방 교수의 분석대로 현재 북한은 기로에 서 있고, 방 교수가 안타까와 하는 것 이상으로 김정일 정권은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으며 생존전략의 모색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가 한국의 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북한체제를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개념적·이론적 타당성이 의문 시되고 있는 '좌경적 전체주의'체제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¹⁷⁾ 또 실제로 북한사회가 '좌경적 전체주의'사회라면 한국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대북정책도 북한에게 전혀 먹혀들 여지가 없을 것이며 극단적으로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의 북한을 전체주의체제로 볼 경우, 최근에 북한이 단안을 내린 '합영법' '인민 소비재안' 그리고 경제특구설치 등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방 교수와는 전혀 다른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몇몇 조치들에 대해 방 교수는 국부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거니와, 좌경적 전체주의체제인 북한이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내린 것은 단순한 국부적 조치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언에서 방 교수가 강도높게 비판했던 기존 북한연구결과들도 사실은 평자와 같은 가정에 기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 북한은 현재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위정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정책창문을 갖게 되었다.¹⁸⁾ 방 교수의 견해대로 김정일에게 주어진 정책창문은 뚜렷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새로운 정책창문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

17)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그리고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26-148쪽 참조.

18) 백학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과 전망」, 세종연구소주최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1995. 8. 25)

졌던 그 어떤 창문보다도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될 것이라는게 평자의 전망이다. 따라서 새롭게 얻게된 정책창문을 통하여 북한이 선택하게 될 대안도 방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반드시 중국식 모델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많은 공산권국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했듯이, 북한은 그들의 언설처럼 정말로 '우리식 사회주의'모델이 창조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북한을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거니와, 방 교수의 권고대로 여러 가지 대북정책 카드를 개발하여 두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인식 아래, 돌발적인 상황에서부터 장기적인 정책대안까지 고려된 일관성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임은 분명하다.

19) 최근 북경에서 열린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서 북측 대표 손영규는 북한의 경우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으니 개혁할 것도 없다. 더구나 소련식 개혁모델은 이미 실패한 것인데 북한이 따를 필요조차 없고, 중국식 모델은 중국인들 자신도 그것이 과도기적인 것이고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시장경제 속으로 말려들어 가는 이유는 '경제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소련식, 중국식, 서구식 등의 모델은 모두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있다. 인간중심의 주체사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백학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과 전망」, 위의 논문, 30쪽 註14에서 재인용.